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김 왕 복

“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학제적인 목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양대 축에 해당한다. 수능 범위를 줄이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학제적인 목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양대 축에 해당한다. 수능 범위를 줄이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19 대학교육협의회의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 이름으로 대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 현 정부의 정책의 지지가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수능을 난이도에 따라 A, B형으로 이원화하고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위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개편의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다. 그 이유는 자율형 사립고 등 자율과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사교육비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수능의 70%를 EBS 교재에서 출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 입상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이번 수능제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문제에는 풍선효과가 있다. 한 쪽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영동한 곳에서 부작용과 함께 다른 문제가 돌출된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의 전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다소 정치적이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목표에 매진하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목표인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교육비 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베이비 부여 시대'인 50대 전후 세대가 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교육에 옮기는 학가족 시대, 70년대 20%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를 정도로 입시경쟁 심화, 소득 증가로 교육비 최우선 지출 경향 등 생활 여건 변화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에게 자녀 교육은 거의 필수불가결의 기본적 욕구에 같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에 우선 투자한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높은 수능 점수를 얻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정부가 무슨 방법으로 막는다 말인가?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수능개편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 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국·영·수 중심으로 난이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것, 둘째, 난이도가 높은 B형은 최대 두 과목만 응시하도록 한 것, 셋째,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한 과목씩만 보도록 했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최우수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상식적으로 국·영·수 우수자는 우수한 학생으로 통한다. 모든 대학들은 A형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B형 수능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함께 상승작용을 한다면 국·영·수 위주의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고 선형학습을 위한 사

교육비는 증가할 소지가 많다.

더 큰 문제점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영·수 부담은 계속되고 과학 탐구, 사회탐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경우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될 수가 있다.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국·영·수 위주로 하고 국가와 예체능 과목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때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현학적인 목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여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양대 축에 해당한다. 수능 범위를 줄이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없애고 대학은 입학자정 자료로 내신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발 주체인 대학과 교육 주체인 고교 담당자들의 의견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교육감 협의회 또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조영대

요즘 태풍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당연히 4대강 사업에도 적지 않게 피해가 생겼을 것인 대신 신문지상에서나 TV 어느 채널에서도 4대강 사업의 비 피해,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현 정부의 언론장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두세 개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로부터 얼마나 얼마나 잘자리에 앉았는지, 그 중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언론매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알권리를 도와서 하는 역기능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을 접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 보다는 TV나 신문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들에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하든 아니든 - 대운하사업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 3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국민적 핵의도 없이, 그리고 그토록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끗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 는 골리앗 앞에 천막농성과 크레인 위에 하고 있는가? <보성성당 주임신부>

파괴되는 4대강과 언론의 침묵

체들을 보면서 짐짓합마지 느낀다.

언론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진리의 세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불의를 감시고 밭하고 국민에게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순기능적 사명이 거늘, 오늘날 언론은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시녀로 전락해버렸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의 보도매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알권리를 도와서 하는 역기능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을 접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 보다는 TV나 신문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들에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하든 아니든 - 대운하사업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 3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국민적 핵의도 없이, 그리고 그토록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끗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 는 골리앗 앞에 천막농성과 크레인 위에 하고 있는가? <보성성당 주임신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암담'

최근 방송에서 나오는 보도를 들어보니 2010학년도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낸 고등학교 10위까지는 모두 특목고이고 20위권 안엔 서울 강남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독차지했다고 한다.

명품 유치원·영재센터·특목고·명문대 입학·대학 입학,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부유층 자녀의 교육 코스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래서 서민들은 몇몇만원을 아끼기 위해 돈이 적게 드는 공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기

초에는 새벽부터 줄서기 한다. 부유층 사람들은 유치원도 사립 명품 유치원을 보낼 뿐 아니라 그 외에 취학 전부터 1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어전문 학원을 보낼 정도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잘사는 집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일이 공식화 돼버렸다. 빈부 격차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결정되고 그것이 삶의 질과 사회적 계급으로 이어지고, 또 학력이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남보라·광주시 도이동

기고



강준석

2010년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조약이 공포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1897년~1910년)이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었던 경술국치로부터 100년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강제병합에 대한 진실이었던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우기는 상황이 분기지만 한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정중한 예우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관계 회복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책무에 우리 후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근거가 된 한일강제병합 조약이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이라는 불법성과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인정해야

매천 황현선생 순국 의미 잊지말아야

매우 뜻 깊은 해이다. 특히 광양에서 태어나 조선후기 대표적인 지식인이며 독립운동가로서 그 기개가 하늘을 치를 듯 했던 매천 황현선생이 한일 강제병합에 율분을 토하고 순국한지도 100년이 됐다. 선생께서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 해 9월 10일, 자결로써 우리 국민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빛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수 많은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으로 이룩된 나라이다.

단기간 내에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를 순국선열들이 보여준 '위국현신'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국민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이 땅에 제2의 경술국치는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하고,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수 많은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으로 이룩된 나라이다. 그리고 국권침탈의 희생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좌우당한 일제 징용피해자들 등에 대한 일본의 정중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개인의 이익으로 삼은 매국노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판단도 내려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수 많은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으로 이룩된 나라이다. 그리고 국권침탈의 희생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좌우당한 일제 징용피해자들 등에 대한 일본의 정중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개인의 이익으로 삼은 매국노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판단도 내려져야 한다.

〈순천보훈지청장〉

시중은행 카드 판촉 경쟁 자체를

시가워로 갈기갈기 쪼개서 벼렸다. 이렇게 낭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용카드 제작비용은 전부 은행의 소모성 경비로 지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도 결국 고객들이 지는 것 아닌가.

직원을 동원해서 그런 카드 만들기 경쟁을 하는거야 회사 맘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남발할 경우 국민에게 빚지고 사는 규모를 늘리라는 끌이며, 그것이 개인들의 신용상태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국민들은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큰 은행들의 카드 판촉 경쟁을 자체해 주기 바란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룡동

시설

추석물가 '뜀박질'에 대책은 '제자리 걸음'

을 여름 불볕더위와 잦은 비로 각종 식품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엉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곤짜스'가 한반도를 훨씬면서 추석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8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값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0%나 폭등했다. 특히 무는 126.6%, 마늘 85.0%, 수박 72.6%, 배추 35.9% 등 주요 장바구니 물가는 뛴 정도를 넘어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농수산물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태풍 '곤짜스'로 배와 밭 등 재수용 과일과 가을채 소비해까지 겪어 차례상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직 '곤짜스'의 전체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2일 오전 현재 전남의 배과수원 가운데 42㏊에서 배가 떨어졌고 밤 재배지 20㏊의 30% 정도도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멀티 등 수산물도 우리나라에 연근해의 이상자원으로 미온화되거나 폭염으로 물가가 폭등하면 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는 2일 부랴부랴 '추석 민생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민생 안정방안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치수는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매년 나오던 각 부처의 물가안정 임시 방면을 종합해 놓은 데 그쳐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을 뛰며 물가를 점검하고 품목별 저점 관리나 특별 단속,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해마다 재탕되는 수단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려면 이런 미시적 수단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 농수축산물의 생산·수급 조절 방안 등보다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12개 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가 행정안전부의 면적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비만청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도 본청은 면적 기준보다 57.2%를 초과했고, 광주시 역시 31.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 결산 기준으로 3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광주 동구와 함평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순, 영암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대수준이다.

해당 자체는 행안부의 지시대로 청사 초과 면적분을 1년 안에 공사·공단 등에 입대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재정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게 던지는 위험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비만청사'는 신축비 과다와 관리비 증가 등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지금유예를 선언한 것도 호화청사 신축에 따른 빚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 그런데 비만청사가 12곳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43.2%이고 전남도 역시도 단위 중 가장 낮은 11.5%에 불과하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 결산 기준으로 3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광주 동구와 함평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순, 영암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대수준이다.

해당 자체는 행안부의 지시대로 청사 초과 면적분을 1년 안에 공사·공단 등에 입대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재정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게 던지는 위험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패탄나면 결국 그 고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아픈 기억때문에 이번 우승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더구나 미셀위는 할아버지 고장인 장흥과도 인연을 맺고 있다. 장흥군은 미셀위의 이름을 따 'I Shall We'라는 공동 브랜드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